

중소·벤처기업 간담회 관련 질의답변 내용

1. 질의(제면조합) :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자금이 몰리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고금리로도 자금조달이 곤란하므로 대출취급직원에 대한 면책기준 적용이 필요

□ 답변(재경부장관) : 단기적으로는 신용보증의 확대공급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,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자체의 신용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

2. 질의(자동차조합, 대우자동차 혁신회) : 현행 특례보증한도 4억원은 부족하므로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어야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음

□ 답변(재경부장관) : 대우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11.3일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한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

3. 질의(EZ 디지털, 콘텐츠코리아) : 최근 일부 벤처기업가들의 탈법행위는 벤처를 위장한 금융사건인데도 벤처산업의 위기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유감

- 벤처관련 악성루머로 건실한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벤처투자후에 성과가 날 때까지 꾸준히 기다려 줄 필요
-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과도하게 조달하여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조달규모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필요
- 벤처기업관련 IR행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
- 기술담보대출제도를 활성화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□ 답변(재정부장관) : 벤처산업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벤처산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

□ 답변(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) :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하겠음

-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 실패 사례를 보고 위기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

4. 질의(동성화학, 디케이씨키트) :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외연수생 quota를 늘려주길 바람

☐ 답변(중소기업청) :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제를 활용하고 여건을 보아가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음

5. 질의(정보통신조합) : 단체수익계약(카르텔)을 당분간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재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임

☐ 답변(중소기업청장) : 99년부터 매년 20%씩 감축해오던 단체수익계약을 2000년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

6. 질의(삼우중공업) : 어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함

- ☐ 답변(재경부장관) : 어음제도를 대신하는 기업구매자대출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결제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어음보험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음

7. 질의(정보통신조합) : 정보·통신조합은 산업자원부 산하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창구일원화가 필요

- ☐ 답변(산자부 차관) : 산자부와 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정보통신조합이 원활하게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음

8. 질의(성주, 앙스모드) : 여성지원특별법이 있지만 아직도 여성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므로 정부측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

- ☐ 답변(중소기업은행장) :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여성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하겠음

-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10만여개의 기업체중 1만5천여개 정도가 여성이 CEO임

9. 질의(슈퍼연합회) : 중소유통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설립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과다설립 및 과도한 판매촉진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

☐ 답변(산자부차관) : 경품행사등 공정거래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한하겠지만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더 이상의 규제는 곤란

10. 질의(면방조합) : 원자재를 대기업이 수입·배분하기보다는 실수요자단체에서 수입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

☐ 답변(산자부차관) :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음